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  
손상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2007노284]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서흥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 변호사 우수정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7. 6. 선고 2007고합13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 양형과경

피고인 2에 대하여 : 사실오인(상해의 점),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이건 불법집회 원천봉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원천봉쇄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천시 농민관련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던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린 것이다.

피고인 2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여타 일반의 재물손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는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에 그치고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을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경조차 막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사사건들에 관한 양형선례와 비교하여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시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을 삭제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에서 '상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 양형과경

피고인 2에 대하여 : 사실오인(상해의 점),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이건 불법집회 원천봉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원천봉쇄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과경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천시 농민관련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던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린 것이다.

피고인 2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여타 일반의 재물손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는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에 그치고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을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경조차 막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사사건들에 관한 양형선례와 비교하여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시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을 삭제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에서 '상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 양형과경

피고인 2에 대하여 : 사실오인(상해의 점),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이건 불법집회 원천봉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원천봉쇄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과경

#####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천시 농민관련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던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린 것이다.

피고인 2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여타 일반의 재물손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는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에 그치고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을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경조차 막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사사건들에 관한 양형선례와 비교하여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시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을 삭제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에서 '상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 양형과경

피고인 2에 대하여 : 사실오인(상해의 점),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이건 불법집회 원천봉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원천봉쇄를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과경

##### 2. 판단

####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천시 농민관련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던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수리비 186,45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린 것이다.

피고인 2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여타 일반의 재물손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는 경찰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것에 그치고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물건을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경조차 막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다소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서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사사건들에 관한 양형선례와 비교하여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을 삭제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에서 '상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